

동북아 지역 FTA 추진 전망

-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

1. 지역협력 기반 조성
2. 3국간 협력 현황
3. 3국의 경제적 위상
4. 한·중·일 FTA 추진 가능성
5. 고려사항

세계화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럭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에 강한 모멘텀을 제공하게 될 것임.

현재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제고 등에 힘입어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모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이해득실과 관련, 각국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국은 이를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채택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과의 연계 속에서 그 기반을 조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상정하되 우선적으로 FTA보다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업체로부터 출발하여 그 다음으로 FTA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할 것임. 또한, 3국간 협력체 구성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발전시켜 점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3국간 협력을 대북한 정책과 연계시켜 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지역협력 기반 조성

-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전세계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지역블록화 내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움직임은 21세기 세계경제의 주된 흐름임. 주요국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1993년 11월 유럽연합조약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EU를 출범시킨 데 이어 현재의 15개 회원국에서 향후 일정에 따라 중부유럽과 동부유럽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음. 미주에서는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가 3국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의 주도 하에 쿠바를 제외한 역내 34개국이 2005년 협상 종결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결성을 추진 중임.
-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역내 국가들만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협력체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걸림돌로 지적되어 옴.
 - 첫째, 한·중·일 3국간의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임. 성공적 통합 조건에 관한 다양한 논의 속에서 발전 수준의 질적 차이점은 통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
 - 둘째, 체제의 상이성임. 일본과 한국이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데 반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임. 상이한 경제 체제는 제도적 통합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 셋째, 한·중·일 3국간의 역사적 갈등임. 동북아 지역에는 중국과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행위라는 역사적 상처가 잔존함.
 - 통신·수송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망간 연계 부족 등 또한 상호의존성 심화를 통한 통합 기반 형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제시됨.
 - 그밖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동북아 지역에 미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이 형성될 경우 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미국의 견제도 지적됨.

-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의 역내 정세 흐름은 동북아 지역 경제통합을 가능케 하는 요인을 확인해 주고 있음.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여년간에 걸친 중국의 고속성장 성공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상과 1990년 초부터의 일본경제의 정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은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 가능성을 일층 높여 주었음.
- 중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력 증대로 동북아 지역은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역내의 무역, 투자 등 경제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제개발 경험, 중국이 지닌 양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은 3국간 경제구조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이점을 지님.
 - 원천기술에서는 일본이 앞서고 저가제품 대량생산에는 중국이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의 원천기술을 들여다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무역의 경우도, 최근 발표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일본에 소비재를,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자본재와 핵심 부품소재를 각각 수출하는 삼각구도를 형성하면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결국 중국경제의 부상과 일본경제의 정체 및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경험은 한·중·일 3국간의 외환 및 금융, 무역, 투자 분야에서 3국간 연계를 더욱 강화시킴.
- 또한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이미 4차례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간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1999년 11월 마닐라 ASEAN+3 회의시 개최된 한·중·일 3국정상회담에서 진일보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통상, 관세, 투자, 금융, 산업, 농업, 어업,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물류·관광, 정보통신, 환경 등 10개 분야 협력방안 공동연구에 합의함.
 - 아울러 2000년 IT 전문가 그룹 설치 합의,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2001년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 신설과 비즈니스포

럼 개최 합의, 그리고 2002년 3국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 합의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국간 경제협력체 구성에 대한 공동인식이 형성 중에 있음.

2. 3국간 협력 현황

가. 정부간 협력

- 한·중·일 3국은 99년부터 시작된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3자간 경제 협력 기반을 점차 확충해 나감.
 - 특히, 2002년도에는 정상회의 합의 등에 따라 경제·통상장관회의(9월, 브루나이), 재무장관회의(5월, 상하이), IT장관회의(9월, 모로코) 등이 개최(환경장관회의는 99년부터 개최)됨으로써 협력 수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함.
- 우선 제1차 정상회의(1999.11.28, 필리핀 마닐라)에서 3국은 한국측 제의로 ‘3국 연구소간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함.
 - 3국 정상(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오부치 게이조 총리 참석)은 동 회동에서 한국경제 위기 극복, 일본경제 회복, 중국의 위엔화 가치 안정 및 WTO 가입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이어 제2차 정상회의(2000.11.25, 싱가포르)에서 3국간 정상회담의 정례화, ‘IT 국장급 전문가그룹’의 설치 등 IT 협력, 환경문제 공동대응 및 ‘환경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환경협력에 합의함.
 - 3국(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모리 요시로 총리 참석)은 또한, 2002년을 ‘한·중·일 국민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3국 청년지도자 교류 프로그램’ 등을 추진기로 함.
- 또한 제3차 정상회의(2001.11.5, 브루나이)에서 3국 정상(김대중 대통령, 주룽지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참석)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3국 경제장관회의(경제·통상장관회의 및 재무장관회의)의 신설, 비즈니스

포럼 개최(기업인 참석) 추진, 경제협력 공동연구의 지속에 합의함.

- 지난해의 제4차 정상회의(2002.11.4,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김석수 총리가 참석(중국측 주룽지 총리, 일본측 고이즈미 총리 참석)한 가운데 3국간에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공동연구기로 함.

나. 민간분야 협력

- 정부간 협력과 함께 기업인간 협의체인 ‘3국 비즈니스포럼’을 신설하고, 한·중·일 경제연구소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등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음.
- 2001년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2년 11월 서울에서 3국의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비즈니스포럼이 개최되었음.
 - 동 포럼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산업부문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서울선언문’이 채택됨.
 - 비즈니스포럼은 3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개최 예정이며, 금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됨.
- 99년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2001년부터 3국 경제연구소[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국무원 산하 發展研究中心(DRC), 일본 總合研究開發機構(NIRA)]가 3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공동연구 중임.
 - 2001년에 3국간 무역증진 방안, 2002년에 3국간 투자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금년부터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3. 3국의 경제적 위상

가. 세계경제에서의 위상

- 한·중·일 3국이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GDP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계경제

의 약 1/5을 점유함. 다음 <표-1>에서와 같이 2002년도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3국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한국 1.70%, 중국 3.82%, 일본 12.89%로 총 18.40%이며, 홍콩 0.57%를 추가하면 18.96%에 달함.

<표-1>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중·일의 GDP 비중

(단위: %)

연도 국가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1.58	1.60	1.47	1.58	1.65	1.66	1.70	1.75	1.78	1.81
중국	2.88	3.02	3.18	3.31	3.44	3.63	3.82	3.96	4.11	4.28
일본	14.77	14.52	14.04	13.72	13.48	13.23	12.89	12.65	12.46	12.32
한+중+일	19.23	19.14	18.69	18.61	18.56	18.53	18.40	18.35	18.35	18.41
홍콩	0.57	0.58	0.53	0.53	0.57	0.55	0.56	0.56	0.56	0.57
한·중·일+홍콩	19.8	19.72	19.22	19.14	19.13	19.08	18.96	18.91	18.91	18.98

*자료(통상교섭본부 작성): DRI·WEFA, The World Outlook, First Quarter, 2002 및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March, 2002.

- 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 비중은 2000년 현재 약 13.8%를 차지하며, 총수출의 11.0%, 총수입의 16.5%(홍콩 포함시 각각 15.7%, 13.9%, 17.5%)를 차지함. 또한 <표-2>에서와 같이 ASEAN+3(동아시아) 경제에서의 한·중·일 3국의 비중은 동아시아 GDP의 89.5%(2001년 현재)를 차지하였고, 동아시아 총교역의 68.9%(2000년 현재)를 차지하였음.

<표-2> 동아시아에서 한·중·일의 GDP 및 교역 비중

(단위: %)

	GDP(2001)	총교역(2000)	수출(2000)	수입(2000)
한국	8.0	12.5	13.7	11.7
중국	17.6	23.6	19.9	26.1
일본	63.9	32.8	32.0	33.4
한국+중국+일본	89.5	68.9	65.6	71.2

*자료(통상교섭본부 작성): DRI·WEFA, The World Outlook, First Quarter, 2002 및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March, 2002.

나. 3국간 교역 현황

- 한·중·일 3국간 교역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함. <표-3>에
서와 같이 91년-2001년간 중·일간 교역은 약 4배, 한·중간 교역은 7
배, 한·일간 교역은 1.3배 증가함. 3국간 역내 교역비중은 1990년
11.3%에서 1996년 20.2% 도달 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1998년 16.9%
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19.8%로 회복되었음.
- 한편, 1999년 현재 ASEAN과 NAFTA 회원국의 역내교역 비중은
각각 21.6% 및 46.5%임.

<표-3> 3국간 교역 현황(총교역)

(단위: 백만\$)

연도	중·일	일·중	중·한	한·중	일·한	한·일
90	16,866	18,202	669	-	29,242	31,212
91	20,284	22,853	3,245	4,444	32,469	33,476
92	25,385	28,939	5,061	6,379	29,382	31,057
93	39,085	38,004	8,220	9,080	30,934	31,580
94	47,809	46,256	11,694	11,666	37,885	38,913
95	57,473	57,856	16,976	16,587	48,622	49,685
96	60,078	62,232	20,011	20,019	45,349	47,398
97	60,810	63,519	24,021	23,577	40,703	42,620
98	58,025	57,261	21,287	18,469	27,542	29,105
99	66,167	66,520	25,036	22,552	39,227	40,005
2000	83,166	85,512	34,500	31,254	51,157	52,294
2001	87,888	93,834	35,940	31,493	44,869	43,139

*자료(통상교섭본부 작성):

- 1990~2000년: IMF, Direction of Trade Yearbook
- 2001년: Ministry of Finance,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01(일·중 및 일·한), 중국해관
총서(중·일 및 중·한), KOTIS(한·중 및 한·일).
- 상기 자료 중 ‘중·일’, ‘중·한’은 중국측 자료 기준이며, ‘일·중’, ‘일·한’은 일본 자료, ‘한·중’ 및
‘한·일’은 한국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표-4>의 경우도 동일함.

- 한·중·일 3국간 교역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의 하나는 교역구조
상의 불균형임.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고,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일본은 중국에 대하여 각각 적자를 보여 왔음. <표-4>에서와 같이 2000년도의 경우 일·중간에는 일본이 248억불 적자, 한·중간에는 중국이 56.6억불 적자이며, 한·일간에는 한국이 113.6억불 적자를 보임.

<표-4> 3국간 무역수지

(2001년 6월 현재, 단위: 백만\$)

국가 연도	중·일	일·중	중·한	한·중	일·한	한·일
1990	1,554	-5,912	-5,912	n/a	5,756	-5,936
1991	220	-5,643	1,113	-2,438	7,707	-8,764
1992	-1,987	-5,005	-185	-1,071	6,190	-7,859
1993	-7,521	-3,298	-2,500	1,221	7,450	-8,452
1994	-4,829	-8,882	-2,942	740	10,837	-11,867
1995	-541	-13,988	-3,600	1,797	13,962	-15,509
1996	1,698	-18,578	-4,957	2,953	13,389	-15,394
1997	2,830	-20,135	-5,749	3,625	11,491	-13,060
1998	1,411	-16,897	-8,755	5,493	4,576	-4,581
1999	-5,369	-19,620	-9,420	4,818	10,471	-8,279
2000	142	-24,800	-11,914	5,656	10,249	-11,362
2001	2,161	-26,832	-10,869	4,888	8,071	-10,128

*자료(통상교섭본부 작성): IMF, Direction of Trade, Yearbook 1998, 1999, 2000, 2002.

*중국측 통계에 따르면 동 기간 중 몇 년간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 적자를 보인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한국측이 통계보다 적자 수준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홍콩 경유 교역에 대한 처리 때문임.

다. 3국간 직접투자 현황

- 3국간의 직접투자는 교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내용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투자국임과 동시에 피투자국이나 중국은 주로 피투자국임. <표-5>에서와 같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0년대 후반에는 감소하였으며,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특수로 인해 지속적인 교역액 증가와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가 전망되며, 중국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가공무역형 투자보다는 내수지향형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표-5> 한국과 일본의 對중국 직접투자

(총투자액 기준)

연 도	한 국		일 본	
	액수 (백만달러)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	액수 (백만달러)	해외직접투자에서의 비중(%)
1990	16	1.7	343	0.6
1991	42	3.8	579	1.4
1992	141	11.6	1,070	3.1
1993	264	20.9	1,691	4.7
1994	633	27.5	2,565	6.2
1995	840	27.0	4,473	8.8
1996	893	20.3	2,510	5.2
1997	719	20.2	1,987	3.7
1998	677	14.4	1,065	2.6
1999	348	10.8	751	1.1
2000	605	12.6	995	2.0
2001	544	13.3	752*	5.5*
2002	657	33.8		

*자료(통상교섭본부 작성) : 한국수출은행, JETRO 백서(투자편), 대장성 금융통계월보

*주: *2001년 상반기 중 투자현황

4. 한·중·일 FTA 추진 가능성

가. 한·중·일 FTA 추진 의의

-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인 동아시아는 유럽(EU), 북미(NAFTA) 등에 비해 지역경제통합이 뒤쳐져 있어 교역 및 투자 측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 국가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음.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각국들이 지역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동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통합 움직임은 아직 미미하고 ASEAN 또는 ASEAN+3 등 국지적 차원에서의 협력만이 모색되고 있음.
- 그러나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3국이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성공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통합이 강한 모멘텀을 얻게 될 것임.
- 현 상황에서 제반 환경으로 보아 한·중·일 FTA는 추진이 시작된다면 그 시기는 2010년 전후나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즉, 한국의 경우, 농업·쌀시장 개방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의 농업분야 협상과 함께 조만간 최소시장접근이나 관세화 등 어떤 형태로든 결말을 내야 할 상황이며, 농촌 노령화와 이농 등으로 앞으로 5-10년 내에 농촌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임.

나. 촉진 요인

- 한·중·일 3국은 경제규모로 볼 때 총 15억의 소비자, 7조 달러의 GDP, 2조 달러의 무역규모 등 유럽(EU)과 북미(NAFTA) 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역동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면에서도 상호보완적임.
- 일본은 10년 연속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지난 8년간 일본의 제2의 교역 상대국이며, 한·중 양국은 상호 제3의 교역 상대국임.
 - 2002년도 중·일간 교역 총액은 1019억불(중국해관 통계)에 달함.
 - 한·중 양국은 일본 대외무역의 20%, 해외직접투자의 10%를 차지함.
 - 향후 2005년까지 교역액은 한·중간 555억불, 중·일간 1,300억불, 한·일간 1,000억불로 총 2,855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일 FTA가 출범할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무역창출효과와 무역 대체 등 3국간 교역량 증대
 - 둘째, 3국간 국제분업 및 생산 전문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셋째, 3국간의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 차이의 경제적 보완관계를 이용한 산업구조 조정 및 자원의 합리적 배분
 - 다섯째, EU, NAFTA 등 세계 경제 주도 지역경제 협력체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 등
- 또한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각국의 경제구조조정 촉진 및 역내 무역·투자 원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동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하나로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됨.

다. 억제 요인

- 한·중·일 3국은 지리적 인접성, 거대한 경제규모,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3국간 교역 및 투자의 지속적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 수준이 미미하여 3국간 경제분야 협력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한·중·일간 FTA 추진에 있어 최대의 장애요인은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간주됨. 일본은 농민이 300만명에 불과하고 농업의 많은 분야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표를 의식한 집권당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시장개방이 지연되고 있음. 한국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이농, 고임금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나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 동의안이 아직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등 농민과 정치권 및 NGO의 저항을 받고 있음.
- 중국도 한·중·일간 FTA 추진시 공산품 특히 중화학공업 분야에서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율 인하를 필연적인 추세로 인식하고 정면 대처해 나가야 할 수밖에 없음.
 - 중국의 관세율은 현재 11%로서 일본의 2.9% 한국의 7.9%에 비하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을 감안하면 실질관세율은 한국 수준에 접근하는 것으로 평가됨을 고려할 때 한·중·일 FTA에 따른 중국의 시장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라. 각국의 입장

1) 중국

- 중국은 종전에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하여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는 대외 정책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미온적이었으나, 고속성장에 따른 국력 신장 및 2001년 12월 WTO 가입과 함께 세계화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 내지 통합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또한 중국은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적인 의도가 함해져서 2001년 11월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제안하고, 2002년 11월 중국-ASEAN간 FTA 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측 양보로 조기에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를 구축코자 추진 중임.
-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제의하고 우선 3국 연구기관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공동연구할 것을 제안하여 합의된 바 있음. 중국의 이러한 적극적 움직임이 한·일간 FTA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음. 현재 중국은 3국간 경제협력체 구성에 가장 적극적이며, 이는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것으로도 해석됨.
- 한·중·일 3국 관계를 하나의 협력체로 발전시킬 경우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안보·경제적 협력관계에 비견할 만한 협력체가 형성되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임.
- 중국은 국가 규모, 고도성장 추세에 비추어 볼 때 3국간 협력체가 구성되면 장기적으로 동 협력체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 국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중요한 경쟁자인 일본을 3국 협력체에 끌어들여 경쟁보다는 협력관계를 이룩함으로서 자국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임.

2) 일본

-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으며 미·일동맹, 한·일 우호관계와 중·일관계의 병행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경계하면서도 중국과 안보 및 경제분야의 협력관계 설정을 희망하는 것으로 관찰됨.
- 일본은 3국간 FTA 추진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주변국과의 무역 원대화부터 우선 추진하는 입장임. 2001년 중국이 ASEAN 10개국과의 FTA 추진을 구체화하자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렀으며, 2002년 1월 실질적인 자유무역협정인 경제동반자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신속히 타결하였음. 또한 일본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일간 FTA 체결에도 한국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일본정부는 중국과의 FTA 및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입장이나 민간부문에서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론이 상당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일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 한편,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FTA 전략(2002.10.15)에 의하면, 일본은 우선 ASEAN 및 한국과 FTA를 타결하여 확고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여타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궁극적으로는 한·중·일+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연계의 관점에서 중국과의 FTA 가능성도 검토가 필요하나, 당분간은 중국의 WTO 협정 이행상황과 경제 동향, 일·중관계 전반, 도하개발아젠다(DDA) 교섭 동향과 아시아 국가들의 FTA 추진 동향 등을 종합

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또한 홍콩에 대해서는 일·중 경제관계 속에서 FTA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검토할 필요성을 인정함.

3) 한국

- 한·중·일 3국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국익에 부합하다고 인식하는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상으로도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경제규모면이나 안보면에서 중·일 모두에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3국 협력체 내에서 중개자 역할이 가능한 입장임.
- 중국은 한국경제의 대외적 활로 개척을 위한 무역·투자 대상지역이며, 일본은 미국과 함께 중요한 우방국으로서 경제면에서도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한국은 우선 한·일 FTA를 선행시키고 이를 토대로 3국간 FTA를 중장기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방향 아래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3국의 공동연구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일부 학자는 한·중 FTA 논의 자체가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강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 중국과 양자간 FTA 체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함. 한·중간 초보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FTA 논의는 FTA 체결까지 수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고려사항

가.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 조성

- ‘참여정부’는 한국이 장차 동북아 경제중심(hub)이 되어야 한다는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바, 그 추진 전

략으로서 동아시아 지역협력 실현을 위해서는 한·중·일 FTA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이러한 구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일 FTA 체결, 한·중 경제협약체 구성 등 양자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중심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적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단계적 공동체 지향 전략 추진

- 한·중·일 3국간 FTA는 일본의 입장이 소극적 내지 부정적인 데다 중국 또한 우선 ASEAN과의 FTA 체결을 10년 이내에 종료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며, 한국도 농업문제가 아직 민감부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칠레와의 FTA를 타결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양자 차원의 FTA를 우선적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현 단계로서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측은 한·중·일 FTA에 관한 일본의 소극적인 입장을 감안하고 한·일간에 FTA 체결이 산·관·학 회의 개최를 통해 검토되는 등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3국간 FTA에 앞서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자는 비공식 제의를 한국측에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한·중 FTA 추진을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과 연구,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현 단계에서는 농업개방의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한·일 FTA 추진과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한·중간 경제협약체 구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임.
-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달성을 상정하되 초기단계로는 FTA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한·중·일 3국간 경제협약체 구성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3국간 경제협약체 설립 추진은 ASEAN+3와 관련, 중국측이 제안한 ‘한·중·일 동반자관계에 관한 Framework’를 기초로 시작할 수도 있으며, 추진 작업은 중국측이 한·일간에 진행되고 있는 FTA에 대하

여 견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감지되는 상황에서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business hub)으로서의 수평적 협력 강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 및 공적개발원조(ODA) 협력 강화 등 동북아 경제협력체 건설을 위한 비전과 이니셔티브를 우리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적으로는 3국 이외에 북한, 몽골, 러시아 등 주변국을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우선 3국간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동북아 지역은 과거 역사상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협력 경험이 부족하므로 쉬운 분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EU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동북아 에너지협력, 금융·통화협력, 과학기술협력, 남북한경제협력을 강화해 협력체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다. 협력의 제도화

- 한·중·일 3국간 협력체 구성은 미국과의 기존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비정치 분야에서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을 위해서는 정치체제나 역사적 갈등구조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면서 상호보완성과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으로 생성될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현 단계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은 ASEAN+3 틀 내에서의 3국 정상회담과 장관급 회의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ASEAN+3 관계를 벗어나 별도의 3국 정상회담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력 논의를 점차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한·중·일 3국간 협력체 설립을 추진할 경우 ASEAN측이 동아시아에서 “+3”의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함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ASEAN의 우려를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북한 참여 가능성 대비

-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며 지역협력의 억제 요인 내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이러한 북한요인이 동북아 지역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3국간 협력 증진을 대북한 정책과 연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협력체 구성을 추진하여 북한을 협력틀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포괄적 경제협력이 추진될 경우 3국간 협력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북한 경제의 개혁·개방 추진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호재임. 다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현안 사항인 북핵문제 해결과 나아가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가 선결조건임.
- 한반도 평화·안정 및 궁극적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앞으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도 대북 수교교섭을 통하여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3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으므로 3국간 협의 아래 대북한 경제지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해야 할 것임.

2003. 7. 4

집필: 연구부장 안효승

토론: 교 수 배궁찬

교 수 이재승

정리: 연 구 원 설규상